

# 국가·국제기구 농업 브리프

## 1

### 미국



#### 미국 농민 가교 지원 프로그램 품목별 단가 발표

미국 농무부(2025.1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1.12.), 재인용.

- 2025년 12월 31일 미국 농무부(USDA)는 무역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120억 달러를 지급하는 농민 가교 지원 프로그램(Farmer Bridge Assistance Program, FBA)의 품목별 지급 단가를 발표함.
- FBA 120억 달러 지원금 중 110억 달러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회성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19종의 작물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은 품목별 에이커당 지급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 품목별 에이커당 지급 단가(USD): 쌀(132.89), 면화(117.35), 귀리(81.75), 땅콩(55.65), 수수(48.11), 옥수수(44.36), 밀(39.35), 병아리콩(소립종, 33.36; 대립종, 26.46), 대두(30.88), 잇꽃(24.86), 렌틸콩(23.98), 유채(23.57), 겨자(23.21), 보리(20.51), 완두콩(19.60), 해바라기(17.32), 참깨(13.68), 아마(8.05)
- 나머지 10억 달러는 특수작물과 설탕 생산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나, 지급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 미국 영양 정책 '역사적 재설정' 발표...“진짜 음식 중심 식단” 강조

미국 농무부(2026.1.7.).

-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25-2030」을 발표하며 미국 연방 영양정책의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정책 재설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번 지침은 “진짜 음식을 먹자(eat real food)”로, 가공도가 높은 식품 소비를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함.
- 새 지침은 단백질 중심 식단과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섭취 확대를 강조하며, 육류·가금류·해산물·계란·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과 콩류·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 식품 섭취를 권장함. 또한 과일·채소·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 확대와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및 첨가당 섭취 제한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특히 기존의 식단 가이드라인과 달리 전지 유제품(full-fat dairy)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단백·자연식 중심의 식단을 통해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감소와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지침은 학교 급식, 군 급식, 공공 영양 프로그램 등 100개 이상의 연방 식품·영양 정책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 미국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가공식품 중심 식생활에서 자연식 중심 식생활로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함.



## 미국,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전유(Whole Milk) 법안' 서명

미국 농무부(2026.1.14.).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전유 법안(Whole Milk for Healthy Kids Act)'에 서명하여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전유(whole milk) 제공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기존에는 학교 급식에서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 시행으로 전지방 우유 선택이 다시 허용됨.

- 해당 법안은 전유 및 향이 첨가된 전유(flavor-added whole milk)까지 학교 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칼슘·비타민 D·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USDA)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우유 소비 감소 문제를 개선하고 영양 섭취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이번 정책 변화는 학교 급식뿐 아니라 미국 낙농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낙농업계와 농업 단체들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와 우유 소비 촉진 측면에서 해당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 이번 법안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미국의 공공 급식 프로그램 및 낙농제품 수요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영국용 저율관세할당(TRQ) 쇠고기 수입 수량 운용 개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026.1.20.).

- 미국 정부는 영국과의 통상 합의에 따라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가별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신설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함.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WTO 쇠고기 TRQ 중 '기타 국가(Other countries)' 물량 일부를 조정하여 연간 1만 3,000톤 규모의 영국 전용 할당량(country-specific quota)을 설정함.
  - 이번 조치는 2025년 발표된 미·영 경제번영 협정(U.S.-UK Economic Prosperity Deal)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만3,000톤 규모의 무관세 TRQ를 설정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영국산 쇠고기 1만3,000톤을 자국 쇠고기 TRQ 내에서 별도 할당하기로 합의함.
  - 해당 조치로 미국의 기존 WTO 쇠고기 TRQ 구조도 일부 조정되어 '기타 국가' 몫 물량은 65,005톤에서 52,005톤으로 감소하고, 대신 영국 전용 TRQ가 새롭게 추가됨. 영국산 쇠고기는 할당 물량 범위 내에서 낮은 관세(약 4.4센트/kg 수준)로 미국 시장에 수출이 가능하게 됨.
- ※ 이번 조치는 미·영 간 농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시장 접근 개선 조치로 평가되며, 양국 간 쇠고기 교역 확대와 글로벌 쇠고기 시장의 TRQ 운용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저산성식품(LACF)의 제조시설·공정 등록제도(FCE-SID) 안내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1.21.).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저산성 통조림식품(LACF) 및 산성화식품(AF)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조시설 등록(FCE)과 제조공정 등록(SID)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 제도는 해당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품별 제조·살균 공정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는 저산성 또는 산성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FDA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등록 완료 시 시설에 고유 FCE 번호가 부여됨. SID(Submission Identifier)는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별 제조·열처리 공정을 FDA에 제출하는 절차로, 제품마다 별도의 SID 번호가 부여됨.
- 저산성식품(LACF)은 일반적으로 pH 4.6 이상, 수분활성도(Aw) 0.85 이상이며 열처리 후 밀봉용기에 포장되어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의미하며, 통조림 제품, 음료, 소스류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제품은 미국 수출 시 시설등록(FCE)과 공정등록(SID)을 모두 완료해야 수출이 가능함.

※ 해당 제도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밀봉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품 유형·용기 형태·제조 및 살균 공정 등에 따라 제품별 공정 등록이 요구될 수 있음.



## 미국 USDA, 라인 속도 규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식품 비용 절감 및 공급망 강화 추진

미국 농무부(2026.2.17.).

-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 가격 안정과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육류 및 가금류 가공시설의 '라인 속도(line speed)'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현대화된 검사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공정·장비·식품안전 관리 능력에 맞는 수준까지 생산 라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존 규정의 비효율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임.
  - 구체적으로 가금류 도축시설의 경우 현재 분당 140마리(birds per minute)로 설정된

최대 라인 속도를 최대 175마리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칠면조 도축시설의 최대 속도도 분당 55마리에서 60마리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됨. 다만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검사 권한을 유지하며, 공정 관리가 미흡할 경우 라인 속도를 낮추도록 지시할 수 있음.

- USDA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공시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식품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 식품 가격 안정과 식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생산량을 확대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생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예상됨.

※ 다만 일부 노동·공중보건 단체에서는 라인 속도 증가가 작업자 안전 및 식품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규정 확정 과정에서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임.



###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치 발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026.2.27.).

-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추가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결함.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판결로 인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145% 추가관세, 대부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최소 10% 상호관세 등 기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문제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일부 분석에서는 환급 규모가 약 1,75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의 지속을 위해 IEEPA 대신 다른 통상법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대안으로는
  - 1962년 통상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시 수입 제한),

- 1974년 통상법 201조(국내 산업 피해 구제 조치),
  - 1974년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1974년 통상법 122조(국제수지 악화 대응, 최대 150일·15% 관세),
  - 1930년 관세법 338조(차별적 조치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 조치나 수입 제한 조치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됨.

## 2

## 유럽

**유럽연합과 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도 상무부(2026.1.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2.2.), 재인용.

- '26년 1월 27일 유럽연합(EU)과 인도가 '07년부터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 이번 협정으로 양측은 주요 농식품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임.
  - 대표적으로 EU산 와인 관세는 150%에서 최종적으로 20~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올리브유 등 식물성 유지류 관세도 최대 45%에서 0%로 철폐될 전망이다. 또한, 빵·초콜릿·제과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최대 50% 관세도 철폐될 예정임. 한편 인도는 차, 커피, 향신료, 포도, 가공식품 등의 EU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가 기대됨.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타결된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적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U 비회원국에 대한 농식품 분야 감사 대폭 확대**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3.).

-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보건·식품 감사 프로그램(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Work Programme)을 통해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EU로 수출하는 비회원국(제3국)에 대한 감사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임. 전체 감사·통제 활동 중 비회원국 대상 감사 비중은 약 51%로 증가하여 이전 연도(약 33%)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임.
- 이러한 감사는 식품·사료 안전, 동물 건강 및 복지, 식물 검역 등 EU 식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EU 시장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위생관리 체계와 수입 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감사 결과는 EU 소비자 신뢰 확보뿐 아니라 수출 허용 여부나 수입 조건 변경 등 통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EU는 식품안전 및 농식품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 기반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EU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비관세 규제(NTM) 성격의 관리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도입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3.).

- EU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대, 포장재 사용량 감축,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PPWR은 포장재의 설계 기준,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목표,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 등을 규정하며, 기업이 사용하는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가능 설계 및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 이러한 규정은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농식품 수출기업은 포장재 규격, 재활용 가능 여부, 환경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

## 아시아

**(일본) 농림수산성 할랄 식품 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일본 농림수산성(2026.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1.19.), 재인용.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수출환경 정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할랄·코셔 인증 제도 조사·보급을 추진하며, 할랄 시장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할랄 식품 수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 주요 내용은 할랄 인증에 대한 제도적 안내, 일본 방문 외국인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주요 이슬람 시장의 최신 정책·유통 동향 공유를 포함함.
- 농림수산성은 공공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식품 기업 중장기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이슬람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지원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할랄·코셔 인증 지원 확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해외 수출 지원 센터 신설 예정

**(일본) 제6차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수립**

일본 농림수산성(2026.1.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1.26.), 재인용.

- 일본 정부는 사회자본정비의 전략적·계획적 진행을 위해 2030년까지의 ‘제6차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 중 농림수산성이 담당하는 사업은 해안(海岸) 사업으로, 농경지·농업용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의 내진성 향상, 하천 및 댐 정비 가속화, 사방(砂防)댐 정비 등 사전 방재 강화 계획이 수립됨.
  -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이란 도로, 철도, 공항, 수도, 하천, 해안(海岸) 등의 사회자본 정비 사업을 중점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계획임.



### (일본) 정부 쌀 재판매 금지 조치 해제

농림수산성, 일본농업신문(2026.1.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2.2.), 재인용.

- 일본 정부는 '25년산 쌀의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어 수급 불안이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비축미 등을 포함한 쌀의 재판매 금지 조치를 '26년 1월 22일부로 해제함.
  - 해당 재판매 금지 조치는 쌀 품귀 현상에 따른 정부비축미의 투기적 재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24년 6월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 일본 정부는 쌀 재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쌀 재판매 금지' 및 '재판매 관련 처벌 규정'이 폐지됨.



### (일본) 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 최고치 경신

농림수산성(2026.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2.2.), 재인용.

-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2025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실적은 1조 7,005억 엔(전년 대비 12.8% 증가)으로 13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경신함. 품목별 수출액은 농산물 11,008억 엔(전년 대비 12.1% 증가), 임산물 735억 엔(10.1% 증가), 수산물 4,231억 엔(17.2% 증가), 소액화물\* 1,031억 엔(5.3% 증가)을 기록함.

\* 무역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1품목 20만 엔 이하 화물

- '25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품목은 쇠고기, 쌀, 녹차, 방어였고, 수출대상 국가는 미국, 대만, 한국이었음. 농림수산성은 일본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건강 식단 지향 등의 요인이 수출액 증가의 배경이라고 밝힘.

※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10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25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04억 달러 기록함.

**(일본) 기구 및 포장용기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 시행**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3.).

- 일본은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용기 재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PL, Positive List)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식품 접촉 용기·포장재에 사용 가능한 물질만 목록(PL)에 등재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PL 제도에 따라 합성수지 등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해 사용 가능한 원료와 첨가물 목록이 지정되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관련 사업자는 사용 물질에 대한 관리와 적합성 확인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함.
- ※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포장용기 및 식품 접촉 재질이 PL 제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통관 제한 또는 유통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중국)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호주 반응**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026.1.6.).

- 중국 상무부는 수입 쇠고기 증가로 자국 축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쇠고기 수입에 국가별 할당량(TRQ)을 설정함. 해당 조치에 따라 할당량을 초과하는 쇠고기 수입에는 최대 5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조치는 약 3년간 시행될 예정임.
- 호주 정부와 축산업계는 이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함. 호주 야당 국민당 대표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는 중국의 결정이 호주 축산업계에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호주 정부는 외교적 협의를 통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호주 축산업계 단체인 호주육류산업협의회(AMIC) 역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 쇠고기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호주산 쇠고기가 중국 축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 시장이 호주산 쇠고기

기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수출 감소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함.

- 한편 호주 정부와 업계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할 방침임. 동시에 중국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도 검토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로 평가되며, 글로벌 쇠고기 교역 구조와 주요 수출국의 대중국 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수입농산물 및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 관리 변경 예고**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3.).

- 중국 해관총서(GACC)는 수입농산물 및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 관리 제도 개정을 예고하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절차를 조정할 계획임. 이번 개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외 제조업체의 등록 요건과 관리 방식이 일부 변경될 예정임.
- 개정안에는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 절차 및 관리 방식의 개선, 관련 등록 정보의 관리 강화, 그리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향후 세부 시행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외 제조업체 등록 요건 및 관리 규정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홍콩/대만) 2월 비관세장벽**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2.27.).

-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8개 국가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함. 해당 조치는 세계동물

보건기구(WOAH) 및 각국 정부의 질병 발생 통보에 따른 것으로, 공중보건 보호 및 질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됨. 수입 중단 대상은 가금육과 계란 등 가금류 관련 제품이며, 조치 시행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제한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홍콩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region-based)'로 수입을 제한하는 검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제품은 즉시 통관이 제한됨. 이러한 조치는 식품 안전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 및 수출 기업은 수출 지역의 질병 발생 여부와 수입 규제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경우 2월 기준 수입제도 변경이나 통관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기존 식품안전 관리 및 통관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대만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기업의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됨.

※ 종합적으로 홍콩·대만 지역의 2월 비관세장벽 동향은 홍콩의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검역 규제 강화 사례로서 농식품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검역(SPS) 조치에 해당함.



### (대만) 수입식품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3.).

- 대만 식품의약품서(TFDA)는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통관 단계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수입식품에 대해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risk-based management)를 적용하여 고위험 식품에 대한 검사 비중을 확대하고 식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수입식품의 등록 및 신고 절차,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 시 서류검사뿐 아니라 현장 검사 및 샘플 검사 등을 병행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임.

※ 대만은 식품안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향후 수입식품의 검사 절차 및 규정 준수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수출기업은 사전 등록, 검사 기준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및 등록절차 강화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2.13.).

-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제품 등록·자가신고·국가 검사 등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요건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수입식품에 대해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risk-based inspection)를 도입하여 검사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고, 서류 검토뿐 아니라 실물 검사 및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관 단계의 식품안전 관리가 강화됨. 또한 제품 공표 및 등록 절차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장 진입 전 안전성 검증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 이러한 제도 개편은 베트남 식품 시장에서 제품 등록, 검사,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수입 전 등록 절차 및 검사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베트남은 식품안전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관세장벽(NTM) 성격의 규제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4

## 국제기구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6% 하락**

유엔식량농업기구(2026.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1.19.), 재인용.

- 2025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4.3포인트로 전월(125.1포인트) 대비 0.6% 하락, 전년 동월(127.3포인트) 대비 2.4%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유지류(-0.2%), 육류(-1.3%), 유제품(-4.4%)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고 곡물(1.7%), 설탕(2.4%)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음.

**WTO 개혁 논의 확대**

UNCTAD(2026a: 4).

- 제14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4)는 카메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 확대 속에서 WTO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본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상소기구(Appellate Body) 복원,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차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유지 등임.
  - 또한 농업·어업, 전자상거래 규범, 투자촉진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IF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논의될 전망이다.
  - 추가로 향후 WTO 개혁 의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로는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한 보조금과 친환경 라벨링 제도에 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WTO 개혁 의제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인상 및 보호무역 확대

UNCTAD(2026a: 5-6).

- 관세가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이자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관세 수준이 상승하였으며 그 영향은 산업부문과 교역 상대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sup>1)</sup>
  - 관세 인상은 수입 비용 증가와 교역 구조 변화로 이어져 무역 흐름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 구조가 단순한 국가들은 수출 감소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원자재와 관련된 관세 인상은 생계와 식량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전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 추세

UNCTAD(2026a: 9-11).

- 지난 10년간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5.3% 증가하여 상품 무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세계무역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 서비스 수출성장률은 약 9%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서비스화(Servicification)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확대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를 차지함.
  - 다만, 국가간 디지털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수출의 약 61%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반면에 반면 최빈개도국(LDCs)은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서비스는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예를 들

1) UNCTAD(2026a: 6)에 따르면, 농업의 경우 2024년 5.7%의 관세율에서 2025년 6.7%로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2024년 1.9%에서 4.7%로 2.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지대(AfCFTA)의 디지털 무역 의정서, 미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 간의 최근 양자 협정, ASEAN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협상이 이에 해당함.



### 남남(South-South) 무역 확대 추세

UNCTAD(2026a: 12-14).

- 개도국간의 무역을 지칭하는 남남(South-South)무역은 글로벌 무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간 상품 수출은 약 0.5조 달러에서 6.8조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개발도상국 수출의 약 57%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시아 지역의 가치 가치사슬 확대, 그중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 네트워크 확장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는 지역 간 남남무역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출의 절반 이상이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통합이 활성화되고 신흥경제국이 주요 수입시장으로 부상한 결과로 해석됨.
  - 위와 같은 현상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외 지역 간 무역(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활성화된다면 지역간 남남무역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 문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의제로 부상

UNCTAD(2026a: 15).

- 환경 관련 의제가 실질적인 이행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2026년에는 해양, 생물다양성, 수산보조금, 수자원과 관련된 국제 협정들이 발표됨에 따라 환경 거버넌스가 무역과 경제정책에 본격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됨.

-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는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임. 본 회의에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의제로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산림파괴 중단’, ‘화석연료 의존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등이 포함됨.
- 녹색경제는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2026년에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수입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게 됨. 이는 동등한 탄소가격제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유럽 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탄소 관련 규제와 산업정책은 무역 방향을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녹색기술과 금융에 대한 포용적 접근 확대, 환경 상품(environmental goods)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이 필요함.



#### 농산물 무역: 글로벌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

UNCTAD(2026a: 18-19).

- 농산물 무역은 글로벌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식품 및 농산물은 전세계 상품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식품이 약 87%를 차지함. 특히 개발도상국은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 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농산물 수출은 또한 농가 및 농업 종사자의 소득과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농산물 시장은 다양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분쟁, 무역 제한 조치, 극단적 기상현상 등이 식량 및 비료 공급망을 교란하였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량 감소와 지역적 공급 부족이 나타나 식량 가격 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재정 여력과 정책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나타남.
  - 취약 경제권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식량 무역에 대한 개방이 안전장치로서 작용할 것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수입을 활용하고 동시에 과도한 수입의존도

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sup>2)</sup> 다만, 저소득 국가들은 낮은 농업 생산성과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향후 식량 원자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 구축은 정책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해당 체계를 통해 정책 당국은 식량 수입 비용 관리, 생산 구조 다변화, 식량 위기 예방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원자재 시장의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식량 시장 안정성과 금융 안정성 간의 연계성도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국가별 무역규제 강화 전망

UNCTAD(2026a: 20-21).

- 최근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 조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각국 정부는 안보, 산업정책, 공중보건, 환경 등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sup>3)</sup>
  - 일부 주요 경제권은 자국 규범과 기준을 해외에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호 경쟁적인 규제 블록(Regulatory Blocks)을 형성하여 중소 규모 국가에게 특정 규제 체제를 선택해야하는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음. 즉 탄소국경세(CBAM), 산림파괴 및 노동 기준과 연계된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수출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정 준수를 부담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26년에도 비관세조치(NTMs)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수출국이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 행정 절차 및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인하여 더 큰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보다 유연한 글로벌 무역 규범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서는 종자 비료·농기계 등 생산 투입재 접근성 확대, 농촌 인프라 개선, 금융 접근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기술의 확산 등이 요구됨.

3) 현재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 기준(SPS)은 전 세계 무역의 약 2/3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모로는 약 2조 6천억 달러가 해당 규제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



## WHO 2025년 가당음료세 관련 글로벌 보고서 발표

세계보건기구(2026.1.13.), 조선일보(2026.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2026.2.2.), 재인용.

- '26년 1월 13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 가당음료세 관련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에서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가당음료에 개별소비세(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많은 국가들이 100% 과일 주스, 가당 차, 커피, 가당 우유 등 당이 함유된 음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가당 생수를 비주류 음료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가당 탄산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준은 평균적으로 소매가격의 9.7%에 불과했으며, '22년 이후 가당 탄산음료의 구매력이 감소한 국가는 2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이에 WHO는 소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율을 충분히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는 지난 2월 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 관세 변화의 부정적 영향

UNCTAD(2026b: 20-21).

- 관세 변화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누진관세 체계로 인하여 완화될 수도 있으나 강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만약 강화된다면 원자재 수출국이 가치사슬의 상위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즉 기존의 산업 특화 구조를 강화하고 원자재 생산국의 부가가치 확대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가치사슬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sup>4)</sup>가 적용되는데, 관세 구조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가 강화될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코코아-초콜릿 가치사슬의 경우 원료 코코아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초콜릿 제품에는 관세가 상승하여 높은 관세가 적용됨.

4) '누진관세'란 원료의 관세를 낮게 하고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최세균 외, 2002).

- 최근 미국의 관세 조정에서 코코아 원두에 대한 관세는 변하지 않은 반면에 초콜릿 제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상승함.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는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요 초콜릿 공급국(캐나다, 멕시코, 벨기에, 스위스 등)은 코코아 생산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됨. 따라서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가나, 인도네시아 등 코코아 생산국은 여전히 원료 코코아 수출이 가능하지만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짐.

## ■ 참고문헌

최세균, 임송수, 어명근(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1.12.), KREI 주간브리프 제2호.

\_\_\_\_\_ (2026.1.19.), KREI 주간브리프 제3호.

\_\_\_\_\_ (2026.1.26.), KREI 주간브리프 제4호.

\_\_\_\_\_ (2026.2.2.), KREI 주간브리프 제5호.

UNCTAD(2026a), “Global Trade Update: Top Trends Redefining Global Trade in 2026”.

\_\_\_\_\_ (2026b), “Global Trade Update: Who Wins When Trade Policies Shift?”.

### 〈보도자료〉

미국 농무부 보도자료(2026.1.14.), “Whole Milk is Back: President Trump Signs Whole Milk for Healthy Kids Act”.

\_\_\_\_\_ (2026.1.7.), “Kennedy, Rollins Unveil Historic Rest of U.S. Nutrition Polity, Put Real Food Back at Center of Health”.

\_\_\_\_\_ (2026.2.17.), “USDA Takes Action To Lower Food Costs on Consumers and Strengthen the Supply Chain through Proposed Changes to Line Speed Rules”.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026.1.6.), “中国の新たなセーフガード措置に対する豪州の反応(중국의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호주 반응)”.

\_\_\_\_\_ (2026.1.8.), “米国は英国向けの低関税の牛肉輸入数量の運用を開始(미국, 영국용 저울관세할당 쇠고기 수입 수량 운용 개시)”.

\_\_\_\_\_ (2026.2.27.) “連邦最高裁判所判決に伴い、新たな関税措置を発表(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치 발표)”.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1.21.), “[미국] 저산성식품(LACF)의 제조시설·공정 등록제도(FCE-SID) 안내”.

\_\_\_\_\_ (2026.2.13.), “[홍콩/대만] 2월 비관세장벽”.

\_\_\_\_\_ (2026.2.13.), “비관세장벽 이슈 브리핑”.